

제242회 임시회 시정질문·답변
시정질문과 답변내용(일괄질문·일괄답변)입니다.



오 광 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갑천친수구역 공동주택을 공영개발로 하여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오광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집행기관의 의회 경시 및 소통 부족의 문제, 대전시 산하 지방 공기업 임원의 인사에 관한 문제, 갑천친수구역 1·2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재개발방식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시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질문서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나 최근 벌어지는 상황이 너무도 엄중하기에 급히 질문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농단으로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열망 속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대전에서도 새롭게 변화된 시대정신을 반영해달라는 시민들의 열망 속에 허태정 시장님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렇게 출범한 민선 7기 허태정호는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비전 아래 혁신과 포용, 소통과 참여, 공정과 신뢰라는 3대 핵심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민선 7기가 이전과 다르게 공론화를 통한 갈등구조의 해결,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노력 등 시민의 주권을 강화하는 시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의 기대가 큼니다.

스스로 혁신하고 시민과 소통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대전 시민의 행복이고 민선 7기가 성공하는 길일 것입니다.

시장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시민의 눈높이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직자가 변화하는 시민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스스로 혁신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시정의 난맥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이 보여주고 있는 의회 경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8대 의회 개원과 함께 집행기관은 의회에 대해 자료제출을 원활히 하지 않아 의원들로부터 원성을 샀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가깝게는 동료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밝혔듯이 공직자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과 갈등을 만들어서 의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평촌산업단지에 LNG발전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시의원에게조차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은 매우 심각한 의회 경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추진한 주민설명회는 단 20여 명만 모아놓고 속전속결로 치른 그동안 해온 형식적 행정의 관행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관행적 행정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유성시장에 있는 장대B지구는 지금 개발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황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최고조인 곳입니다.



그런데 시유지 이용에 대한 주민질의에 모 과장의 전결로 동의의견을 보낸 바 있습니다. 아무리 법적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이처럼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전시 행정에는 이러한 배려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행정부실을 초래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얼마 전 안영동 체육공원 축구장 조성과정에서 최초 설계된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구설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좀 더 면밀하게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세 가지 핵심가치로 선정하신 소통과 참여는 시민과 시장님과 소통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소통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과의 소통, 시장님을 대신한 집행기관과 시민 간의 소통, 또한 집행기관과 시의회와의 소통도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공정과 신뢰라는 가치는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형성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을 한번 더 돌아보는 노력이 바로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예를 들어서 문제점을 지적한 집행기관의 의회 경시, 소통

부족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개선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 산하 지방공기업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 인사에 대한 잡음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대전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민선 7기 이전 여러 단체장을 거치면서 대전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의 간부자리를 퇴임을 앞둔 공무원들로 채우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4개의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임원을 살펴보면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창립 이래 재임한 18명의 사장과 상임이사 중에 공무원 출신이 13명입니다.

대전도시공사 또한 31명 중 20명이 공무원 출신이고 대전마케팅공사와 시설관리공단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상임이사 직위만 떼어서 살펴보면 공무원의 편중임용이 더욱 심각합니다.

대전마케팅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창립 이래 이사에 임명된 외부 또는 내부인력은 각각 1명밖에 없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3명을 외부전문가로 영입하거나 내부승진자로 임원에 기용한 것은 그나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산하 10개의 출자·출연기관 또한 다르지 않지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인사 관행이 이뤄져 온 것은 시 산하기관의 운영에 있어 시와의 원활한 관계형성이 중요한데 이사 등 임원까지 외부 출신으로 임명되면 시와의

업무소통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자리를 옮겨서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창립이래 상임이사 중 내부 승진자

 DJET 대전도시철도공사	11명중 1명
 DCCO 대전도시공사	22명중 1명
 DIME 대전하이빌공사	4명중 0명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12명중 0명

하지만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임기가 보장되는 산하기관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정년 연령을 넘기게 되어 특혜논란의 소지가 있고 임기 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담보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공단 조직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승진에 대한 기회가 봉쇄되고 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결과 조직 구성원의 사기 진작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직의 인사에서 내부, 외부로 떠나 특정 집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거나 반대로 일부 특정 집단만을 위주로 임용하는 것은 결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라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를 위해 공정한 평가를 위한 지표를 마련하고 법령 및 조례정비 등 제도적 기반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는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갑천친수구역 1·2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개발방식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규모 생태호수공원을 만들어서 대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호수공원에 대한 개발논의는 2005년에 확정된 대전 공원화 2012 기본계획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막대한 사업비와 경지정리된 절대농지라는 이유로 백지화되는 등 좌절을 겪었고 그 이후에도 국비보조가 수반되는 4대강 지류사업으로 호수공원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이 또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호수공원 조성의 최대 걸림돌은 사업비 확보 문제였습니다. 결국 대전시는 전체를 호수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수정하여 일부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상업시설부지를 조성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선회하였습니다. 마침내 2014년 1월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진행과정을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지난해 분양한 친수구역 공동주택 3블록이 최고 537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이곳은 대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거지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한 공동주택단지가 최고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면서 마치 생태공원이 아파트단지를 위해 조성되는 것처럼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도시공사가 전적으로 맡아 시행하는 공영개발방식과 도시공사와 민간이 함께 개발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민관 공동개발방식 중 과연 어떤 사업추진방식이 대전시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갑천친수구역 1·2블록이 공영개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 사업을 통해 얻어진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전도시공사로부터 받은 갑천지구 공동주택 1·2블록 건설사업 추진 방안 검토자료에 따르면 공영개발방식의 수익은 593억 원으로 민관 공동시행 방식의 수익 416억 원에 비해 177억 원의 추가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검토(예상)

구분	도시공사 직접시행	민간·도시공사 공동시행	차액
1블록	324억	227억	97억
2블록	269억	189억	80억
계	593억	416억	177억

※ 출처: 대전도시공사 자료

이 177억 원은 2017년 대전시가 동구와 대덕구에 내려보낸 지방교부세 183억 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비단 이 자료가 아니더라도 공영개발방식이 민간업체와 도시공사가 수익을 나누는 공동시행방식보다 수익성이 높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 대전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도시공사가 친수구역사업을 통해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서민을 위한 주택사업에 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로 지역의 더 많은 건설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지업체가 선정될 경우 지역 하도급과 자재사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지역 건설업체와 49% 이상의 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전업체의 장비 및 자재사용의 기회도 확보할 수 있어 지역건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대전도시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80%를 지역업체에 하도급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세 번째로 공영개발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실소유주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국민주택 특별공급에 따라 장애인·다문화가정·신혼부부·다자녀가정·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배려에도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의 책정에도 시민들에게 유리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에게 더 많은 휴식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생태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사업비 확보를 이유로 시민들의 이해와 양보를 요구했고 많은 갈등과 논의 끝에 시민들은 기대 편익을 희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를 내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생태호수공원을 멋지게 조성해 주리란 바람으로 대전시를 믿어준 시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은 지금 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친수구역 공동주택사업은 일부 시민들의 희생 속에서 진행되었기에 대전시를 믿고 희생해준 시민들을 위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원도심 활성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건설업체와 나눌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를 본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갑천친수구역 1·2블록 공동주택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의지 특히,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오광영 의원님께서서는 집행기관과 시의회와의 소통 문제, 대전시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공정한 조직운영과 갑천친수구역 1·2블록 사업추진방식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대전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회정의에 대해 남다른 열정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의회 경시 또 소통 부재에 관한 질타와 더불어서 대책을 주문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전시의회와의 소통 부재에 관한 지적에 관해서는 다른 어떠한 이유가 없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장으로서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이제 20년을 넘어셨습니다. 지방자치가 잘 성장하고 시민의견이 잘 수렴되려고 하면 무엇보다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의회의 위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제 의회가 단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에서 이제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대전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정책에 관한 적정성, 예산의 투명성 이러한 모든 문제에 관해서 주요한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상이 분명하고 이를 집행기관은 존중해야 됩니다.

또한 견제와 감시의 범위를 떠나서 대전시정 전반에 관해서 의회의 의견을 묻고 이를 통해서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대전시 집행기관의 역할이고 책무입니다. 이런 면에서 일련에 있었던 사업에 대한, 여러 일정에 대한 의사소통 부재에 관해서는 집행기관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집행기관이 의회와 소통하고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나가는 동반자로서의 위상을 인정하고 함께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통 강화를 통해서 앞으로 현안 관련해서는 상임위와 집행기관 간부들 간에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한 소통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과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이하 의회 간부들과의 소통의 기회도 주기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정은 시의회와 더 폭넓은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잘 연결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전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임원 임용 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전시의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이 설립된 이후 대전시정에 대한 연계성 유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부 공무원 출신들이 산하기관에 많이 임용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기에 시의 인사적체 해소의 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서 관련 기관들의 전문성이나 내부 조직원의 사기저하 등 부정적인 요소들도 함께 지적되어져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선 7기 들어서는 공직자들이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이런 일들은 최대한 자제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원칙들을 잘 지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논란과 관련된 근본적 개혁과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법령, 조례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있고 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기관장 인사에 있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후보자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개편방향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및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현재 의원 발의되어 법 개정절차에 따라서 의회와 협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지표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도를 잘 보완해서 실질적인 후보자 검증이 이루어져서 능력 있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안 갑천친수구역사업과 관련해서 1·2블록 공동주택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어오셨습니다.

갑천친수구역 1·2블록을 무주택서민을 배려하고 도시공사의 수익성을 높여서 원도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1·2블록 추진방식은 당초 민간에 아파트부지를 공급하여 개발하는 민영 개발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지난해 2월에 시민단체와 협약을 통해서 민관 공동시행으로 합의하고 시민에게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장으로서의 판단과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 시민 사회와 합의를 통해서 민관 공동시행으로 결정되어진 바가 있어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 방식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관 공동시행은 민간기업의 참여방식 및 경쟁에 따라 민간개발과 공영개발의 장점을 잘 접목시킨 사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공영개발의 장점인 무주택서민 배려, 저렴한 분양가, 지역 업체 참여 등을 최대한 반영해서 공공성을 최대한 높이는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사가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을 원도심지역 경제 활성화에 쓰일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칩니다.

■ 보충질문(오광영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 오광영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인사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갑천친수구역의 1·2블록 공동주택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민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지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10%를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특별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택 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기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장의 이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향후 공급되는 1·2블록에서 특별공급을 늘리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1·2블록 공동주택사업은 평수를 줄이고 층고를 낮춰서 갑천친수구역 아파트가 생태 아파트가 되게 하는 것이 기존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평수를 줄이고 층고를 낮출 생각은 없으신지, 더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2블록 안에 임대세대를 넣을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오광영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의원님께서서는 크게 세 가지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도안 1·2블록의 특별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제기와 더불어서 대전시의 입장을 질문했고요. 두 번째로는 평수를 줄이고 층고를 낮추는 문제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으로서 갖고 있는 개인적인 철학과 이런 문제들을 떠나서 우리 사회가 이미 지난해 합의한 사안으로써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공급 확대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현행 기준을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 사회의 필요한 분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평수를 줄이는 문제도 우리가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문제이나 층고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 추가적인 검토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이 자리에서 확답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는 임대주택 확대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마도 지역에 있는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추가공급의 필요성에 대한 제기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임대주택은 4블록에 1,195세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5블록의 200세대를 민영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을 바꿔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광영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